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자율주행택시시대 도래에 따른 서울택시 공존방안 모색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1)는 2025년 12월 17일(수)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자율주행택시시대 도래에 따른 서울택시 공존방안 모색 토론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교통위원회

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이병윤 교통위원회장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김동완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의 축사와 함께 문성호 서울시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자율주행택시에 대한 주제 발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동영 전문연구원이 진행하였으며,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이경숙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장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 토론자로선 김겨중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정아 아주대학교 연구교수, 이우영 HC택시 대표이사,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정준호 서울시 의원, 손형권 택시정책과장이 참여하여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율주행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택시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아울러 기존 택시 시장과 첨단기술이 상생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등의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김동영 전문위원은 ‘서울특별시 로보택시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기존 택시 면허 기반을 활용한 서울형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을 발표하였다. 또한,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한 국내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 ▲기존 운수 종사자와의 갈등 해소 및 협력적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를 위한 핵심적인 쟁점들이 다뤄졌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교통위원회장은 “자율주행 기술 도입은 미래 택시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다만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술의 진보’와 ‘사람의 삶’이 충돌이 아닌 조화 속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창성 기자

인천시의회 이명규·나상길 의원, 부평지하상가 재난대응 강화 업무 협약 의미 강조



인천부평소방서·인천시설공단·인천교통공사가 부평지하상가(부평역사)에서 열린 재난안전 및 피해저감 사업 완료설명회 및 공동협력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지난 17일 인천 부평지하상가(부평역사)에서 열린 재난안전 및 피해저감 사업 완료설명회 및 공동협력 업무협약식은 부평지하상가 및 역사 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나상길의원(무·부평구4) 의원이 참석해 준공 및 협약 체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김태영 인천부평소방서장을 비롯해 인천부평소방서·인천시설공단·인천교통공사 관계자, 서영배 부평대야하도상가 상인회장, 백형록 신부평지하도상가 상인회장, 구부회 부평지하도상가 상인회장, 각 상인회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이명규 의원은 부평지하상가가 하루 유동인구 약 13만 명, 점포 약 1천400개 규모의 밀집시설임을 언급하며 “시민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공간은 이용이 줄 수밖에 없다. 안전투자는 상권 활성화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하공간은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피 동선이 복잡하고 연기 확산 속도도 빨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현장 대응 매뉴얼을 더 촘촘히 하고, 기관별 역할과 연락체계가 실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상시 점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설비 구축만으로는 시민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정기 점검과 반복 훈련이 함께 돌아갈 때 비로소 안전이 ‘상시 작동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상길 의원도 “설치 그 자체보다 설치 이후 어떻게 관리·운영하느냐가 시민 안전을 좌우한다”며 “협약이 문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약은 작은 오작동 하나가 곧 시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장비가 자동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뿐 아니라 무인 시간대·혼잡 시간대 등 다양한 조건에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운영·통제

하는지까지 명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 의원은 또 “상인과 이용자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안내표지, 대피 유도, 방송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은 ‘설치 완료’가 아니라 ‘운영이 표준화되고 반복 검증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협약 체결 직후 참석자들은 부평지하상가 내 방재시스템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연막(스모그) 장비를 활용해 연기 발생 상황을 재현하고, 양압(가압) 운전 시 연기 유입 차단 여부를 점검하는 시연이 이뤄졌다.

또 양압 전실(노약자 임시대피공간)의 안내표지와 운영 원칙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현장 설명에서는 해당 공간이 법정 대피시설로 요인되지 않도록 안내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원칙은 외부 대피라는 전제하에 보행·이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구조대 도착 전 3-5분가량 대기하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 공간이라는 취지가 함께 제시됐다.

아울러 이용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 운영’ 등 보조 표지를 명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화재 시 차단막(방화·방연 차단)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자동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으며, 화재 발생 시 다수 지점이 동시에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그룹별 선택 질문과 일괄 복수도 가능하다는 점이 공유했다. 다만 일부 작동 이슈가 확인돼 현재는 사무실 상주 시간에는 수동 운영을 병행하고, 무인 시간대(야간) 자동 전환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막설비(물 분사 장치)는 일정 각도로 분사해 연기 확산을 1차적으로 저감하고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취지로 소개됐다. 동시에 지하 역사 특성상 전기설비의 민감도 등을 고려해 실제 운영·제거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명규·나상길 의원은 “준공과 협약이 끝이 아니라 관리주체 확정, 운영기준 정립, 정기 점검, 훈련체계까지 갖춰야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으로 이어진다”며 “협약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경기도의회 김성남 위원장,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장 김진경 의장)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국민의힘·포천2)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민주당·안산1), 명재성 의원(더민주·고양5), 안계일 의원(국민의힘·성남7), 임상오 의원(국민의힘·동두천2)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

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송민수 기자

군포시의회, 2025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제285회 정례회를 폐회하며 2025년도 회기 운영을 마감했다.

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8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공형 청년주택을 조성하는 청년누리 조성 사업의 신중한 추진(관련 예산 1억여원 감액) 등을 당부하며 총 9천100여억원 규모의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번 예산 심의에서 시의원들은 되도록 경비 삭감이나 감액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집행 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 점

검관리에 집중했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김귀근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민선 8기 시장 운영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게 조언하는 정책 제안 중심의 회기였다”라며 “전체 예산안 중 약 4억5천만원 정도만 삭감한 것은 깊은 고민의 결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2025년에 5번의 임시회, 2번의 정례회를 개최하며 총 95건의 의원 발의 자치법규를 제정했다.

지난해 의원 발의로 정비된 자치법규가 71건인데 비해 24건이 증가한 것으로, 시민 복지 향상과 도시 안전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등 민생 중심 의정활동에 더 노력한 성과라고 시의회의는 강조했다.

2025년에 시의회에서 심의결된 전체 안건과 자세한 회의 결과 등은 공식 누리집(gunpocouncil.go.kr)에서 전자영상 회의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송민수 기자

남동구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남동구의회(의장 이정순)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남동구의회 공무원의출장 결과 보고의 건 등을 처리하였다.

남동구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이뤄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추진되었는지를 검토해 105건의 시정 및 건의 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정당성 및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바탕으로 남동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 심사했다.

남동구에서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1조 2832억 4천만원은 6천9백4십만원 증액되어 최종 1조 2833억 1천만원 규모로 확정됐다.

또한 이철상 의원은 남동구청 관용차량 불법 경과등 및 엠브 사용 실태 개선 촉구 건에 대해, 김재남 의원은 구월지구 개발에 따른 공공기어 불균형 해결 촉구건에 대하여 5분 발언하였다.

이정순 남동구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 동안 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한 동료의원과 적극 협조해 준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향후 구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심하린 기자

송진을 새롭게
 군민을 신나게

힐링가득한 덕적도 여행!

덕적도 자연휴양림

예약방법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니들'에서 예약

문의

숲니들 통합고객센터 : ☎ 1588-3250
 덕적도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실 : ☎ 032-899-2860